

【문12】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하여 최 대선거구와 최소선 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이 넘으면 평등원칙에 반한 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 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③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 ④ 국가유공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받지만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아니한다.

【문13】 갑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의 법률조항(이하 이 문항에서 제A조라고 하자)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한편 감사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제1심에 계속중이다. 갑은 자신이 위반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제A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중 갑이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제1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② 제1심법원이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
- ③ 제1심판결을 받아보고 제2심법원에 항소한 후 제2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④ 제2심판결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 ⑤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문14】 법관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관은 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아니한다.
-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문15】 헌법개정 of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에 다음 중 헌법개정 of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 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
- ②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
- ③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것
- ④ 복수정당제를 폐지하는 것
- 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

【문16】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이 아닌 것은? (다수의견에 의함)

- 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
- ②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④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수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17】 국회의 회의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 ①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 ③ 의사공개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 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문18】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국회의 노동위원회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③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는 당해 국가의 자유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문19】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 ②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 ③ 농어민의 이익보호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 ④ 공정거래의 보장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및 조정
- ⑤ 지하자원 등의 채취·개발 또는 이용의 특허 및 국가의 보호

【문20】 다음 중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의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 ② 법질서의 통일성,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 법률의 유효추정, 법적 안정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 ③ 단순위헌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전형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의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상법 30문 】

【문2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기업의 상호등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그 사항의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 ②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④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⑤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문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므로 그 인원수는 2명 이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반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
-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⑤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수령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문23】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⑤ 객의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24】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문25】 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 즉 무효인 불완전어음이 아니고 백지어음으로서 유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 ⑤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